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2. 5 .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박윤옥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안 제3조~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6조,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안 제12조, 안 제13조)
-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및 포상(안 제14조~제1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다.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라. 입법예고 : 2025. 1. 24. ~ 1. 31.(7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관계 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여비는 최대 750천원 예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산출 내역(추정) : 총 750천원(7명×100천원, 1명×50천원)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여비(2025년도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

편성기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위원 참석여비	
➡ 위원회 참석수당(일당) - 기본료 : 100천원 / 2시간 - 초 과 : 50천원 사이버위원회 등 참석수당(일당) - 기본료 : 50천원 / 시간 - 초 과 : 20천원 ※ 서면회의는 기본료만 지급	➡ 위원회 참석여비(일당) - 일비(일당) : 25천원 - 식비(일당) : 25천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1호 적용	

○ 교육 및 홍보, 제정지원, 포상 비용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예산산정이 어려워 예산 추계 미반영

#### 4.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